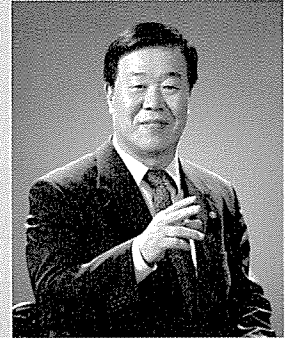


국가적 아젠다 1, 에너지 정책을 풀어간다

- 방폐장 부지선정을 대표적인 갈등해결의 모범사례로 -



산업자원부 차관 이원걸

최근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따라 원자력이 가지는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교토의정서 발효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면서 CO₂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이 현실적 대안의 하나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은 전체 전력공급량의 38%를 차지하면서 산업체 등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없었다면 고유가로 인해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여 국민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다.

방폐장 건설부지 올해 안에 선정 끝내야...

그런데 원자력 발전,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 원자력의 이용과정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 특히 신규 원전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병원, 산업체 등이 증가하면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도 계속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1986년 이후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

장이 달라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작업복, 장갑과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세기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임시저장 시설들은 2008년경에 포화가 예상된다. 처분시설의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금년 내에 반드시 부지가 선정되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는 임시저장 시설을 늘려서라도 중저준위 폐기물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광원전만 보더라도 임시저장고 건축허가에 4년 이상이나 걸리는 등 쉬운 일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 없이 처분시설을 운영하는 나라도 호주, 베트남 등 14개국에 이르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민신뢰 속에 유치지역 선정 절차 진행 중

과거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부족과 주민들의 낮은 수용성이 부지선정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정부는 금년 3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법으로 담보하는 등 과거와 달리 국민의 신뢰 속에서 유치지역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는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자체가 유치를 신청하였으며, 11월 2일에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거쳐 찬

최근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따라 원자력이 가지는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고도의 청정 발전으로 원자력 발전이 현실적 대안의 하나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Democratic

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후보부지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의 유치지역 선정 과정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공표에 의해 진행되던 절차가 特別法에 주민투표를 필수절차로 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한 점이다. 둘째는 과거에는 중저준위와 사용 후 핵연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였지만, 이번에는 특별법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저준위로 한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사용 후 핵연료는 예상 포화시점이 2016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앞으로 구성 예정인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민의 신뢰를 높였다는 점이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

앞으로 유치지역이 선정되면 처분시설의 건설부터 운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간 환경감시기구』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나갈 생각이다.

특히 유치지역은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기피시설로 여겨왔던 점을 감안하여 획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다. 지원금 3천억원, 연간 85억원 수준의 반입수수료,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일본 로카쇼무라의 경우 1992년 방폐장 건설로 인구도 증가하고 매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와 관광수입을 올리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 이것은 처분시설 유치가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민주적 투명한 절차만이 주민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

유치신청 지역은 유치의 찬반여부에 관한 토론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흑색선전 등도 우려된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만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해 준다는 점을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

19년째 표류하고 있는 유치지역 선정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갈등사안 해결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 역시 특별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치지역 선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